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

■ 대구지하철화재참사 관련

1. 시장의 책임
2. 시장이 밝힌 재해대응 행정·재정시스템의 구축방안
3. 지하철참사의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섭시다!
4. 백서발간 관련
5. 감사원의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6. 성금집행에 대한 현황 및 집행 계획
7. 추모사업의 추진 경과 및 계획

■ 행정정보공개 확대

- 1,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및 시행규칙 모니터 개요
- ※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 상황 모니터

대

2003년 2월 18일의 그 검은 연기의 기억이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는 11월 27일(목)에도 지하철참사와 관련하여 당시 사장의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참사는 아직도 계속 중입니다.

엄청난 비극을 이겨내는 것과 잇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모든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참사를 잘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의무일 것입니다.

1. 시장의 책임(조해녕시장퇴진운동본부 해체 성명서 중 / 대구참여연대 홈페이지 11. 14)

① 2.18참사로 인한 유족들의 아픔과 지역민의 요구를 대변해온 조퇴본의 정신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다. 수구적 정치세력, 보수적 검찰행정, 관료적 공직사회로 인해 도덕과 책임, 개혁이 실종된 지역사회에서 탈정파적 도덕성과 개혁정신으로 참사의 책임을 묻고 대구시를 개혁하고자 한 시민사회운동의 정신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그 누구도 이를 폄하하지 못할 것이다.

② 조퇴본을 해체한다하여 조해녕시장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퇴진운동이 종결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참사 직후 군 병력을 동원, 현장을 훼손하는 상식 밖의 행동으로 유족들의 가슴에 천추의 한을 남긴 조해녕시장, 참사에 관한 일말의 도의적, 행정적 책임도 지지 않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여 대구시민들을 분노케 한 조해녕시장, 빈번한 말 바꾸기와 약속 파기로 유족들과 시민사회를 농락한 대구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조시장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그 책임을 묻고 대구시 행정을 주시할 것이다.

③ 지방자치의 개혁, 지역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더욱 진전된 길로 나아갈 것이다. 조퇴본이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요인은 주체역량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잘못된 정치제도와 관료사회의 경직성에서 기인한 바 크다. 지방의 정책을 주민스스로 결정하고,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의 제도화를 촉진할 것이다. 또한 지역 관료사회의 부도덕성과 정치사회의 수구성에 억눌린 시민사회의 도덕성과 개혁의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2. 시장이 밝힌 재해대응 행정·재정시스템의 구축방안(대구시의회 홈페이지 / 제120회 대구시임시회 본회의 4. 9)

- ① 기존의 재해·재난 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재해·재난관련 기능과 조직을 우리 여건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정비
- ② 분산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
- ③ 자원봉사단체의 시민단체와 상호지원 체제를 확립
- ④ 민·관·군 등 유관기관·단체간의 공조체제를 구축
- 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과의 조정통제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통합관리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시스템 구축
- ⑥ 계절별 위해 요인을 감안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각계 전문가와 수시 합동 안전점검을 강화
- ⑦ 재난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상 및 실제 훈련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대형 재해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대응능력
- ⑧ 법정 확보액에 미달하고 있는 재해·재난관리기금확보 문제는 앞으로 법규상에 정한 규정대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⑨ 재난관리청이 신설되면 국가재난방지종합 대책과 연계하여 우리 시의 재난관련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비

3. 지하철참사의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섭시다!(대구시홈페이지 7. 1)

- 앞으로 남은 희생자 추도 사업, 피해자 보상 등의 문제를 유가족 및 부상자 여러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며, 이번 참사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고 대구를 안전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백서발간 관련(대구시의회 홈페이지 / 제123회 대구시임시회 경제교통위원회 2003년도대구광역시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7. 18)

○ 金忠煥委員196페이지 백서발간 종합에 예산이 1,200만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특별지원단 활동백서유인물 제작 200종에서 2,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활동백서, 지하철. 이것이 백서발간종합이 지하철화재참사와 관련된 백서를 얘기하는거죠?

○ 交通局長 李勝鎬 그렇습니다.

... .. (중략)

○金忠煥委員 이 1,200만원 가지고 백서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交通局長 李勝鎬 지금 백서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공무원들이 만든다면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죽 사실 기술 형태로 이렇게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전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백서를 만든다면 있었던 일을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대책까지 마련하는 그런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200만원 가지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백서를 만들기에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金忠煥委員 지하철백서에 예산금액을 왜 얘기하는가 하면 마치 6월29일날 합동영결식이 끝나고 지하철화재참사의 문제가 이제는 끝난 것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데 제 말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지하철백서 제작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대구지하철 건설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내장재나 불연재를 이렇게 시설해서 운영하게 된 사유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또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 감독에 대한 귀책사유가 대구에 있다라고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백서발간은 앞으로 지하철화재참사를 예방하고 안전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때우는 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정말 부끄러운 역사를 좀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는 중요한 근거로 만들 수 있도록 확실하게 신경 써 가지고 그렇게 좀 백서를...

○交通局長 李勝鎬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감사원의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감사원 홈페이지 / 2003. 9)

가. 대구지하철 방화사고시 인명피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요인

① 전동차 내장재 기준 등 부적정에 대하여 : 철도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교통공단 이사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 직접 또는 관하의 지하철건설본부장이나 산하의 지하철공사 사장 등으로 하여금 전동차 구매규격서에 내장재의 재질, 난연성을 선진외국 수준과 같이 상향조정하는 등 명확히 정하고 난연성 검사방법과 시험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에 잘 타지 않는 전동차를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불량한 내장재는 하자보수 조치(전동차 제작업체와 제작비 분담 등을 협상하여 상향조정될 난연성기준에 맞도록 보완)하고 제작중에 있는 전동차의 경우도 상향될 난연성 기준에 맞게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② 제연설비(除煙設備) 설치 및 운영 등 불합리에 대하여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등 9개 기관의 장에게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계단 사이에 제연경계벽을 설치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제연설비 자동운전프로그램을 수동으로 변경하여 각종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전하도록 하며, 바람이나 먼지의 영향 때문에 오작동

을 자주 일으키는 연기감지기와 화재수신반을 오작동 방지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변경·설치하고 연기감지기는 설치면적과 간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③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 등 미흡에 대하여 : 행정자치부장관, 대구광역시시장에게 관련자를 징계요구하고, 인명구조에 헌신적이었던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직원들을 감사원장의 표창대상자로 선정

나. 비상시 행동요령 등 재난·재해 대응체계

① 도시철도 안전대책 수립·추진 등 부적정 :

- 철도청장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장들에게 앞으로는 도시철도 안전대책을 실효성 있게 수립·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2년마다 약 100원씩 운임을 올리겠다고 방침을 정한 중기재정계획 등을 수정하여 운임을 현실화함으로써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고

- 건설교통부장관에게는 도시철도 운영기관들로 이루어진 안전관리협의체를 만들어 안전대책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게 하고 안전대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부담하고 있는 무임운송비,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도시철도 운영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임현실화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② 안전관리 인력 운영 등 불합리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장에게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및 각종 질환에 대해 상담해주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상담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용하되 개인의 비밀보호를 전제로 한 주기적인 방문면담을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방안을 강구하며 근로금지대상 질병자 등을 상시 파악 관리하고 휴직,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통보하였다.

③ 비상시 행동요령 및 피난체계 등 불합리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장에게는 비상시 승객들이 계단 또는 터널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경로도를 승강장에 부착해 두고 역무원과 승객들이 취할 행동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교육훈련과 홍보를 하며 환승역사 내 다른 기관 역무원 등 외부기관과의 소방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이러한 내용을 소방계획에 반영시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④ 도시철도 승객에 대한 비상대비 홍보 등 부적정 : 이에 대하여 철도청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장에게 도시철도 안전체험장을 상설 운영하고 교육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내실 있는 안전체험교육을 하도록 하며, 비상시 승객들이 휴대전화, 장애인용 인터폰 등으로 역무원 등에게 통화할 수 있도록 긴급시 연락처 및 연락방법을 홍보하도록 통보

⑤ 지하철 안전문화 의식조사 미흡 : 철도청장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장에게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홍보)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다. 설비 및 전동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

① 종합사령실, 역사설비 등 설치·운영 불합리 : 철도청장 등 9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기관의 장에게 종합사령실에 민방위 경보설비와 비상발전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주요 감시설비를 종합사령실에 연계시키도록 하며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시제어반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② 기타 안전관련 시설물 설치규정 등 불합리

-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강장의 연단과 전동차 사이의 틈이 일정거리 이상이 되면 승객실족사고 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시철도건설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도시철도 운영기관들로 하여금 승객실족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실족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 철도청장 등 9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기관의 장에게는 가용재원과 사고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강장 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6. 성금집행에 대한 현황 및 집행 계획

7. 추모사업의 추진 경과 및 계획

- 불탄 전동차, 화재 참사 현장 보존 등

1.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지난 2002년 7월 10일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이 제정되었으며,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이보다 앞선 2002년 3월 1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자발적인 행정정보의 공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 주기, 방법, 공표 형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대구시장 및 주요 간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대구시의 주요한 장기·기본계획, 시가 개최한 공청회 결과,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개최와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참여”를 위한 시책의 추진과 활성화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트 유니버시아드 Upgrade DAEGU”의 주요한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투명성과 참여를 위한 기본은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일 것입니다.

2.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및 시행규칙 모니터 개요

- 7월 7일(월) ~ 10일(수)까지 대구시 본청에 대한 모니터 진행
- 정보공표 내용의 주요 단어를 대구시청 홈페이지, 행정관리국 게시판에 제공된 ‘2002년도 주요문서목록’, 대구광역시 공보 등에서 검색, 담당부서와의 통화
- 대구광역시의회에게 자료 배부(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에 자료 전달 7. 21)
- 행정관리국장 및 담당자 간담회(7. 31)

※ 별첨 :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 상황 모니터 결과 자료

※ 별첨 :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모니터 결과(2003. 7. 23 발표 자료 요약)

■ 모니터 결과

가. 적정하게 공개된 정보

- ① 당해연도 예산·결산
- ② 소속 사업소 및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 ③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원수·정수의 수질 검사결과, 대기 검사 및 측정결과
- ④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관련 통계
- ⑤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⑥ 각종 용역 발주계획

나. 자료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

- ① 시장·부시장, 실·국·원·본부장과 3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2002년 사용내역을 총괄하여 게시됨(행정관리국 홈페이지)

- ② 각종 용역 발주 결과 :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는 '입찰정보' 게시판 운영 중

==> 2003년 1월 - 6월 3천만원 이상 용역 및 공사 계약 내역 입찰정보란에 게시됨

- ③ 교량·터널·지하철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 2002상반기 교량 정기점검 결과 및 정비계획 제출(도로 58710-20359 '02.7.20) 문서는 '2002주요문서목록'에 있으나 해당 정보가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지 않음

- ④ 시설안전 관리유지 관련 집행현황 /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집행 현황

- ⑤ 제7호 내지 제9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

- ⑥ 행정심판결과

==> 기획관리실 디지털자료실에 게시됨

- ⑦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 지방세 관련 별도 사이트에서 상담, 소개

==> 홈페이지 내에 '대구시지방세민원실' 운영 중

- ⑧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 2002 주요문서목록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건축위원회, 대구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문화재 제1분과위원회, 인사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의 참석 수당 지출 서류 제목은 있으나 해당 위원회의 개최 내용과 결과는 자료를 찾을 수 없음

: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교통국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게시판으로 개최내용과 결과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음

==> 2003년 2회, 3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는 '시정뉴스'에 게시됨

다. 공표시기가 지켜지지 않은 정보

- ① 당해연도 업무계획 : 2월중이나 '03.4.25 게시됨
- ② 당해연도 기금 운용계획(결산승인일로부터 1월 이내)
: '02.12.12 대구시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03.3.31 대구시공보 469호의 '2003 대구광역시 재정운영상황공개'에서 공개됨
- ③ 공개대상기관의 부채 현황 및 상환 계획(결산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
: 2001회계년도 대구광역시 결산은 '02.9.18 행정관리국 게시판에 고시되었으나, 자료는 '03.7.8 대구시예산현황 게시판에 게시됨
- ④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소음 검사 및 측정 결과(검사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 매월)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측정 중이며, 자료는 없음
- ⑤ 공개대상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
: 대구광역시 제증명등징수조례 개정계획(세정 13380-20752 '02.9.8)은 입법예고(대구시공보 454호 '02.10.30), 공포(대구시 공보 461호 '03.1.10) 되었음
: 2002년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계획 제출(교통91100-20424 '02.7.20)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을 수 없음
- ⑥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 내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계약내역 /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수의계약 내역
: 행정관리국 게시판에 2002년도 내역은 수록되어 있음
: 2003년 6월까지의 내역은 정리하여 수록 예정이라고 함.

라. 모니터가 곤란한 정보

- ①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시의 부문별 중기계획·시의 부문별 장기 계획·시의 중요한 기본계획
: 시에서 수립하고 운영하는 각종 계획 자체의 파악이 어려움
: 대구장기발전계획 대구비전-2020의 경우 그 내용이 발표되었음에도 대구시 홈페이지 '대구비전'의 내용은 지난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음
: 중기기방재정계획('02.11)의 경우 자료가 게시되지 않고 있음
: 대구광역시도시교통정비계획(안)의 경우 수립요청 공문(교통 91100-20401 '02.7.15), 수립을 위한 사전보고회(교통 91100-20497 '02.8.29), 수립을 위한 사전보고회 의견 조회(교통 91100-20509 '02.9.2), 대구광역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안)공고(대구시공보 458호 '02.12.10) 이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음
- ② 전문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치구·군, 산하기관, 시의 사무수탁기관 및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기관·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 해당부서에서 수시로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하나, 문서목록에서 조차 해

당 정보의 문서를 찾기 어려움

: 부서별로 먼저 공표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

③ 교량·터널·지하철 등에 대한 시설안전 관리유지 관련 예산 편성,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 편성

: 예산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이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움

■ 종합의견

가. 대구시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이전에 의견제출, 입법예고,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제정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될 자치법규이므로 제정 이전에 여러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시민들 또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받게 됩니다.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 신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조례와 시행규칙을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와 시행규칙에 규정된 21개의 정보공개 항목 중 적정하게 공개된 것은 6개 항목에 불과 합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없거나, 공표시기 위반 등입니다. 자발적인 공개 취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나. 조례의 의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변화가 필요하다.

적정하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의 경우 주의를 기울여 찾지 않는다면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정보는 대부분 시민들에게도 주요한 정보입니다.

조례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는 현재의 대구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조례 관련 코너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사전정보의 충실한 제공이 필요하다.

대구시에서 생산된 정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충실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모니터에서 ‘모니터가 곤란한 정보’의 대부분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시민들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제공되는 ‘주요문서목록’의 내용 또한 좀더 풍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본청의 경우 모두 8,676건의 문서정보목록이 제공되었으나, 그중 각종 지출 관련 내역이 2,47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중기계획·장기계획·중요한 기본계획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나,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